



“내가 소방왕”...속도 방수 경연 24일 충남 천안시 중앙소방학교에서 개최된 ‘제22회 전국소방왕선발대회’에서 참가 선수단이 ‘속도방수’ 경기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工期 당길 ‘제3의 안’ 나올수도

정부가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내 옛 도청 별관을 일부 존치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별관 철거 논란이 사실상 일단락된 가운데 건물의 보존 방식과 향후 공사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존치 방안으로는 별관 보존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기 차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화전당 건립 시기가 별관 논란으로 당초 계획된 2012년 보다 최대 1년 가량 늦춰져 있는데다 광주 지역민들이 전당 조기건립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단장 이병훈)은 25일 오전 광주시 동구 추진단 광주시무소 회의실에서 별관 보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 자리에는 지난 22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10인대책위간 별관을 일부 존치하기로 합의문을 작성한 데 따른 것이다.

이병훈 단장은 별관 보존에 대한 추진단의 기본 입장과 전문가 의견수렴, 설계 변경 절차 등 향후 일정을 소개하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관한 비전을 제

도청별관 일부 존치 방식 어떻게 정해질까
게이트·3분의 1안, 문화전당 개관 늦어져
이병훈 단장 오늘 설계 변경 절차 등 밝혀

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별관의 존치 방식에 대한 추진단의 구상이 제시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까지 거론된 별관의 보존 방식은 10인 대책위가 제안한 ‘게이트’안(별관 1.2층을 뚫어 통로를 만드는 것)과 ‘3분의 1 이상 존치’안이다.

그러나 추진단이 이들 대안 중의 하나를 전폭 수용할 지는 의문이다. 추진단은 지난 8월 기자회견에서 이들 두 개 안에 대해 공기 지연 등 사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추진단은 ‘3분의 1 존치안’의 경우 공기 대비 10~12개월, 예산은 54억~71억원이 추가된다고 밝혔으며, ‘게이트안’은 완공 시기가 2014년으로 2년이 연장되고

예산도 120억~165억원이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제3의 대안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10인 대책위는 정부와 함께 서명한 합의문에 보존방법을 정부에 일임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10인 대책위는 “시민의 정서를 감안해 보존 방법으로 가급적 게이트안으로 하되,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10인 대책위가 합의문에 포함시킨 게이트안은 당초 제기했던 별관의 1, 2층을 뚫어 통로를 만드는 안과 똑같은 개념은 아니어서 유동적이다.

문제는 추진단이 별관의 보존 방식을 결정하는 데는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는 것이다.

문화전당 설계안 확정 때처럼 설계 방식의 변경 등 행정·법률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부담도 있다. 문화전당의 건립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법에 명시된 사업으로 설계 변경이 이뤄질 경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명문화돼 있다.

또 별관 존치 방식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문화전당의 설계자인 유구승씨를 포함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부 방침을 정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전문가들은 추진단이 공기 차질로 문화전당의 완공 시기가 2012년 이후로 미뤄진 상황에서 공정을 서둘러 정상화하기 위해 문화전당의 큰 틀을 흔들지 않는 부분 설계 변경 방식을 택할 것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한 관계자는 “법률·행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물론 별관 존치 방침을 정하고 설계변경까지 착수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야간 집회금지 위한 결정 배경과 전망

학생·직장인 집회 권리 존중 시대 변화 반영 기본권 확대

24일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시법 조항이 합헌에서 위헌 결정으로 뒤바뀐 것은 1994년 이후 15년만이다.

헌법재판소는 세계적 조류에 따라 야간에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생활 등 변화된 시대 환경에 따라 헌법을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더욱 엄격히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촛불재판 피고인들의 경우 대다수가 일반교통방해 등 다른 혐의도 적용됐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계속 늦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의 ‘일몰~일출’ 조항은 너무 넓은 시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직장인과 학생 등의 집회 참가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지나친 제한을 가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 사이에 다소 온도차가 있지만 결국 7명의 재판관들은 시대적 변화를 바탕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데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공통의 결론을 도출한 셈이다.

일방교통방해죄 결정 이후

남은 ‘촛불재판’ 재개될 듯

◇헌법 불합치 판단 배경은=위헌 의견을 낸 이강국 소장 등 5명의 재판관은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의 변천사 속에서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갖고 있는 위헌성의 근거를 찾았다.

집회허가를 금지하는 헌법 조항은 1960년 개정 헌법에서 처음 등장했다가 유신헌법에서 삭제됐고 이후 1987년 민주화운동의 결과 개정된 현행 헌법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 소장 등은 이 같은 역사적 변화가 집회의 자유를 행정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국민들의 헌법적 결단의 결과로써 존중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계사적 조류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이 소장 등은 영국,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여러 나라가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 자체를 아예 두고 있지 않고 프랑스, 러시아 정도가 밤 11시 이후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에 비해 ‘일몰~일출’이라는 조건은 보편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남은 ‘촛불재판’ 어떻게 되나=대검찰청에 따르면 현재 야간집회 금지 조항을 어겨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913명이다. 이 중 야간집회 조항만 문제가 된 사람은 35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작년 10월 야간집회 금지에 문제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자 많은 판사들은 현재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재판을 미뤄놓은 상태였다.

이날 현재 야간집회 금지 조항이 내년 6월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함으로써 촛불집회 재판과 관련한 쟁점 하나는 해결된 셈이지만 향후 모든 촛불집회 사건이 본궤도를 타기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촛불집회 피고인 중 다수가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반과 함께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한 형법상 일방교통방해죄와 함께 기소된 상태인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8부(이민영 부장판사)가 지난 5월 일방교통방해죄에 대해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사들은 야간집회 금지와 일방교통방해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일방교통방해죄에 대한 현재의 판단이 추가로 나올 때까지 사건을 갖고 있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섭의원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불가능”

정부가 최근 제시한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최소 200조원(감세 90조, 세출 증가 110조)의 재

정적자 요인이 있기 때문에 2013년에 재정수지 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GDP 대비 30%대 증반으로 유지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정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

소득세율 인하를 철회하는 등 부자 감세를 중단하고, 세출 측면에서는 4대강 사업, 대규모 토목사업 등 불요불급한 예산의 대폭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

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강조했지만, 지출을 실질경제성장률 수준으로 억제하더라도 중기 재정건전성은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 자문을 받아 중기재정을 시뮬레이션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는 2013년 -2.1%로 조사됐다”며 “이 때문에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광양시 1인당 지방세 부담 기초단체중 최고

광역시선 광주 가장 적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지역에 따라 최고 37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법래(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도 회계 예산 기준으로 전국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95만원이었다.

2007년은 77만7천원, 작년은 88만4천원이었다. 서울시의 2009년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119만9천원으로 가장 높은 반면 가장 낮은 곳

은 부산 북구(3만2천원)로 서울과 무려 116만7천원의 차이가 났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시가 86만9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광주시가 56만1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시·도의 경우 제주도가 79만8천원인 반면 전남 도는 20만2천원에 불과했다.

시·군·구에서 지방세부담액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83만5천원), 경기 연천(96만3천원), 서울 중구(97만원)였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상주(20만1천원), 경북 영양(14만1천원), 부산 북구(3만2천원)이었다.

/연합뉴스

노년배우회

노년배우회 회원들께 제공되는 다양한 혜택을 소개합니다.

- 1.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시 100% 할인)
- 2.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시 100% 할인)
- 3.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시 100% 할인)
- 4.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시 100% 할인)
- 5.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시 100% 할인)
- 6. 회원들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회원가입 시 100% 할인)

문의처: 06-269-6590

인디안 아울렛

새단장 OPEN

광주주월점

70~50%

정상·상실복합 매장
주월동 박마트 옆

구매고객께 사은품 증정!

0621654-7205